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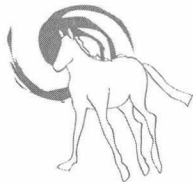
경마에 부과된 과도한 지방세를 인하하여 농어촌사업재원을 확충해야



한·미 FTA 협상의 진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중 농축산업 분야는 시장의 붕괴와 농업 구조조정의 압력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어 자칫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할 정도다. 이미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불균형 성장 정책의 결과로 농촌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지역공동화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한·미 FTA가 몰고 올 파괴력은 우리 농축산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화에 대비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취약한 농어촌 복지증진과 취약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농축산 경기부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재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그나마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 KRA(한국마사회)가 매년 출연하는 축산발전기금의 규모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정책 실현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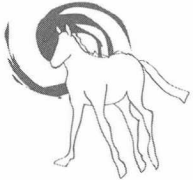
지난 해 KRA가 농어촌사업재원(농어촌특별세,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1,875억원이다. 반면 지방세인 레저세, 교육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8,248억원에 이른다. 특히 기금조성에 있어 KRA가 96%라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경마 매출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와 과도한 세금 부과로 2002년 1,834억원이던 KRA의 출연기금이 지난해에는 675억원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하겠다.



과도한 지방세 부과로 충분한 농어촌사업재원 확보가 어려워

KRA는 한국마사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에서 경마와 마필산업을 농업부문의 틀에서 관리하고 있고, 마필산업 자체가 도시민의 여가활동이 농촌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마산업이 차지하는 위치가 농축산 발전을 위한 포석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자체에 경마레저세가 과도하게 납부되어 KRA(한국마사회)의 경마시행 목적인 마사진흥과 축산발전 기여에 크게 미흡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측면이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및 지방거점 도시에 집중되어 경마를 통해 거둬들

인 지방세의 농촌재정 기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고율의 발매세율은 환급률의 저하로 이어져 불법사설경마 양산의 원인이 되고, 경마팬을 스크린경마게임, pc방 등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해 KRA 매출 감소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마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은 농축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가 틀림없다.



레저세 · 교육세 인하로 우리 농축산 발전에 기여해야

경마산업이 우리 농축산발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레저세와 지방교육세의 비중을 낮추고 농어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촌사업재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재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사용처 공개, 투자사업 내용의 홍보, 수혜자들의 참여폭 확대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복지·교육·축산발전과는 거리가 먼 사업을 배제하여 경마수익금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 인하를 통해 환급률을 높임으로써 경마고객이 불법경마·스크린경마게임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경마 풍토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경마매출의 증대를 통한 농어촌사업재원 확대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과도한 조세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우리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번영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상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과 절대적인 지지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기이다.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농축산단체, 농림부, KRA 등 관련자 모두가 적극 연대하여 우리 농축산업의 생존을 위해 차근차근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